



안보전략논단

[2025년 3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9(25-3) | 2025. 3. 4

여군의 유엔 PKO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박상중

AI 기반 디지털트윈 적용 국방력 강화 방안
이종섭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
홍정기

여군의 유엔 PKO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박 상 중

(향군 논문·논단 위원, 국방대학교 교수,
국제평화활동센터 객원연구원, 육군자문위원)



들어가면서

1·2차 인구절벽 도래,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 국가 위상 제고, 남녀 기회 평등 존중 등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에서 여군의 참여 확대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25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 「여성, 평화와 안보(WPS, Women, Peace, and Security)」가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UN PKO 임무단은 11개가 활동하고 있고, 한국도 부대 또는 개인 파병으로 약 560명이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분쟁 지역의 조직적 강간, 성폭력 등을 계기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UN은 1993년 6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과 12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5년 9월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8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을 채택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쟁 지역의 조직적 강간과 성폭력 문제 해결과 여성과 여아의 보호 증진을 위해 여성의 UN PKO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여성의 PKO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여군의 유엔 PKO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겠다.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 전망

국방혁신은 2005년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2020」과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군의 PKO 참여 확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에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여군의 PKO 참여 제고를 위해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는 ① 국제분쟁 양상의 변화, ② 여성의 PKO 참여 강화, ③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군 참여 확대, ④ 4차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였다.

① 국제분쟁 양상의 변화: 다가오는 미래는 평화와 문명을 지향하는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달려 있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는 「세계평화지수 2024(Global Peace Index 2024)」에서 2024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56건의 분쟁으로 92개 국가가 국제분쟁에 연루되고 1억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군사분쟁 위치 및 분쟁 데이터 연구소(ACLED, 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는 「ACLED 분쟁 지수 및 2025 감시 목록(ACLED Conflict Index & 2025 Watchlist)」에서 2024년 민간인 피해 규모를 최소 233,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2024 세계 기아지수(GHI, Global Hunger Index)」에서 광범위한 분쟁,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UN이 2030년 목표로 설정한 ‘기아 종식(Zero Hunger)’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래에는 젠더(Gender) 불평등, 식량 불안정,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보다 폭력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고, 분쟁 양상도 신체적·물리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여아 대아에 대한 폭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② 여성의 PKO 참여 강화: 1990년 이후 분쟁 지역의 대규모 조직적 강간과 성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은 2000년 5월 31일 「빈트후크 선언(Windhoek Declaration)」을 채택하여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구축 등 제반 평화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나미비아 행동계획(The Namibia Plan of Action)」에 따라 다차원 평화지원작전에서 성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31일 제4213차 회의에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복구(Relief & Recovery)’ 등의 4가지 주요 의제로 제안하였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 군·경 성평등 전략 2018-2028(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을 통해 2028년까지 개인 파병의 25%, 부대 파병의 15%를 여군으로 편성하는 목표를 제안하였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여군의 개인 파병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대 파병은 목표 대비 약 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평화활동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엘시 이니셔티브(Elsie Initiative for Women in Peace Operations)」를 2027년 3월까지 연장하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한국 인구구조 변화와 여군 참여 확대: 한국은 2017년 이후 출생률 급감으로 2024년 12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미래 인구는 2024년 약 5,200만 명에서 2050년 4,700만 명, 2072년 약 3,600만 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는 2022년 말 약 50만 명에서 2040년 약 35만 명으로 약 15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군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6,700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군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등은 여군 비율이 15%를 넘어섰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는 여군 비율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설정한 여군 비율을 2027년 15.3%를 보완하여 2030년에는 2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④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발전: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확산에 따라 무장 국가 간의 분쟁과 국제화된 국가 내의 분쟁,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테러 등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를 위해 2021년 8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디지털 전환 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으로 ‘혁신 추진’, ‘현재 및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극대화’,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책임 있는 사용 보장’ 등 4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1년 3월 UN은 평화유지 구상 플러스(A4P Plus, Action for Peace Plus)를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PKO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의 무기체계가 다차원 PKO로 적용되면 현재의 근육질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여군의 참여 확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다중과업(Multitasking)에서 여성적 역량이 중요한 자질로 고려될 것이다.

여군의 PKO 참여 확대

유엔 UN 평화활동국(DPO)에서 제시한 여군의 PKO 참여에 관한 한국의 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개인 파병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대 파병은 미흡한 상태이다. 연도별 여군의 부대 파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PKO 파병은 178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병 또한 159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4.5% 수준이다. 한국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평화유지구상(A4P),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 Plus), 유엔 PKO 디지털 전환 전략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유엔 여군 교육과정을 유치하며 여성 PKO의 참여율 향상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2023년 9월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3주 과정으로 「유엔 여군 평화유지요원 역량강화 과정(WMPOC, Women’s Military Peace Operations Course)」과 2024년 10월 2.5주 과정으로 「유엔 여군 역량강화 과정(Uniformed Women Peacekeeper’s Training)」을 운용하였다. 특히, 2024년 교육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호주 평화작전훈련센터,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센터가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PKO에서 여군의 참여 확대를 위해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교·통일·국방 정책의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정책 분야의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방전략서」 등에 WPS(여성, 평화와 안보)를 명기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여군의 PKO 참여율 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부대 파병의 여군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파병 전담부대에 여군 인력에 대한 ‘쿼터제(Woman Soldier Quota System)’를 도입하여 15%를 여군 쿼터로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DPO와 협업하여 국제 수준의 여성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여군 PKO 교육과정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상설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가면서

미래의 세계질서는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생명 중시, 자국 우선주의 등 복합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인종적·민족적 분쟁은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될 위험은 작지만, 세계 도처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UN의 다차원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PKO 참여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여성의 PKO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AI 기반 디지털트윈 적용 국방력 강화 방안

이 종 섭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단위원,
동국대 법공학연구센터 연구교수)



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으로 18세기 초기 산업 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고 벌써 10여 년이 다 되고 있는 현 세계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로봇 공학,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3차원 프린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최초의 산업 혁명은 18세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농경 사회와 농촌 사회에서 산업과 도시로 전환되며 일어났다. 증기 엔진 개발이 산업 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다. 2차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으며,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났다. 3차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으로 디지털 혁명으로도 불린다.

인공지능은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OpenAI의 GPT-4나 Anthropic의 Claude 같은 모델을 개발하려면 약 4만 달러(\$) 짜리 GPU가 수천 개 필요하며, 총훈련 비용만 해도 약 1억 달러(한화 1,3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딥시크” 팀이 GPT-4, GPT-5급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든 코드를 오픈소스로 무료 공개하면서 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딥시크 R1(DeepSeek R1)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최첨단 AI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깃허브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과 코드까지 완전히 공개되어 AI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AI 모델 개발의 주체가 거대 IT 기업에서 일반 개발자들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몇 개의 GPU만 있어도 자신의 서버에서 직접 모델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AI 개발이 더욱 접근 가능해지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쌓아둔 경제적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 계획은 정책 계획서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계획대로 과감히 추진하고 적용하면 참 좋은데 왜 적용이 안 되는가?, 적용 방안은 없는 것일까?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다. DX의 본질은 혁신이며, 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 DT)이라고 본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나 제품, 프로세스를 가상 환경에서 정밀하게 구현하여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시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위험 경감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 실험을 활용하면 현실에서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지만,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면 현실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국방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DX의 목적이 혁신이라면, 그리고 혁신을 위해 디지털트윈이 필수적이라면, 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초기 비용과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려면 센서, IoT, 데이터 분석, AI, 시뮬레이션 모델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도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트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 역량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고, 기존 직원이 새롭게 배우기에도 부담이 크다. 결국, 기술적 어려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트윈 도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ROI(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군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투자 대비 효과(ROI)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트윈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초기 구축 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경영진이나 의사결정권자들이 도입을 망설인다. 특히, 기존 방식으로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디지털트윈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방 분야에 DX가 반드시 필요한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트윈이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디지털트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래된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서로 호환되지 않아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AI는 데이터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트윈이다.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험을 활용하면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다.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실험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즉,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시뮬레이션 도구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국방 분야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사결정권자 혹은 해당 분야 인력과 시스템들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진 인력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군 지휘관들은 짧은 보직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치와 부대 안전 유지가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디지털트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입을 미루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트윈이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군 조직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DX의 본질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트윈을 단순한 3D 모델링 도구로 오해한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핵심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3D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디지털트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모아 두기만 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I와 결합하여 의미 있는 예측과 최적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트윈을 도입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방 분야에 디지털트윈이 이렇게 유용한데도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비용, 기술적 어려움, ROI에 대한 불확실성,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디지털트윈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작은 성공 사례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부담이 크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디지털트윈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ROI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생산 효율 10~20% 향상’, ‘유지보수 비용 20~30% 절감’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도입의 필요성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디지털트윈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시스템을 먼저 구축

해야 한다. 그리고 군에 있는 기존의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가상 실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무한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 조직 내 교육과 문화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디지털트윈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임을 국방 분야 인력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주장한 대로 DX는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DX의 핵심 결과물이 바로 디지털트윈이다. 디지털트윈 없이 DX를 추진한다면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리고 디지털트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국방 분야에 디지털트윈의 필요성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디지털트윈을 효과적으로 국방 분야에 활용할 것인가?"를 관련 전문가들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육군 드론봇 및 대드론 체계 전력화 추진 Master Plan 연구 보고서¹⁾

1) 육군 드론봇 및 대드론 체계 전력화 추진 Master Plan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필자가 참여한 보고서 표지 (2023.12)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방안

홍 정 기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단위원,
한국국방외교협회 북한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무장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김정은)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냈고, 제 생각에는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겁니다. 또한 북한이 많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과 2019년에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 세력 수뇌국이라고 칭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였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27차례 서신 교환을 했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는 핵 무력 강화의 길을 계속 걸어왔지만, 여전히 미국과 담판을 염두에 둔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식 날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표현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2.0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부시 정부는 6자회담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트럼프 1기에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인내 2.0에 가까운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gmatic Approach)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소형화·다종화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볼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집권 1기 시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문제(북핵)를 해결했다”고 말하였다.

2025년 1월 22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에 명시됐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는 2025년 1월 1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

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과 증가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가 1월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하였고, “김정은은 남은 생애 동안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 정책으로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언급하였다. CVID는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시 제시한 북한 비핵화 모델로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한편 미국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025년 1월 28일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2017~2021년) 때 그랬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5년 2월 7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25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일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책에 많은 변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등 협상 실무를 추진했던 핵심 인사들인 알렉스 워 국가안보회의 수석 부보좌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케빈 김, 국무부 정무차관인 엘리슨 후커 등이 트럼프 2기에 임명된 것은 북미 협상 및 대화와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후보자 선거 유세에서 북한은 굉장히 심각한 핵보유국(Very Serious Nuclear Power)이라고 했으며, 지난해 7월 미국 공화당 정강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김정은은 2024년 11월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전군 현장지휘관을 모아놓고,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고 연설하였다. 그리고 2024년 12월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정원은 2025년 1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 간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 협상인 스폴 딜(Small Deal)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김정은 속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추진하였던 문제가 미완성 상태에 있으므로 트럼프 2.0 기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남한 정치 상황이 혼란하여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미연합 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철수, 미래 핵 동결 및 축소 등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금지(폐기)와 미국 전략자산 미전개 등을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2023년 1월)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이 약 80~90여 발이고, 2030년에는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2021년 4월)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라는 공동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151~242발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30년엔 최소 핵무기 300개 정도가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KBS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나라의 핵보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74%가 핵 보유를 찬성(매우 찬성 49%, 대체로 찬성 25%)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을 바꿔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적극적,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0년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소다자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고도화·경량화되면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한·미·일 3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2018년 이후부터는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는 3단계로 추진하여야 한다. 1단계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연료를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단계는 소다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북한과 행동 대 행동 원칙 하에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3단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유지시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핵 문제는 이미 국제적 차원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2+4, 남북·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 다자주의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북한 비핵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북한 및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전략구상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맺는말

북한은 올해 3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김정은은 2025년 1월 29일 핵물질 생산기지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며, 핵 대응 태세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2025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에 국방성을 방문하여 “혁명적 무장력은 공화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최고 의무에 언제나 실천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을 통해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스트롱맨(Strongman)들로 인해 긴박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간 이해관계를 갖고 실리적 계산하에 밀착 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 내 이익을 위해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 이시바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군사 및 경제 및 관광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 참가와 5년 만에 중국 관광객 북한 입국 허용 등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서서히 복원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상황에 맞춰 우리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강하게 실천해야 할 때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